

# 기억 연구의 정치학적 시론: '70년만의 귀향' 사례를 중심으로\*

류석진 | 서강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은 기억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정치학적 시론이다.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틀을 만들기 위한 작은 디딤돌적인 시도로서, 첫째 기억활동 유형화 논의에 기초하여 '70년만의 귀향' 사례를 해석한다. '업혀있는 행위자'로 자임하는 기억활동가들이, 자신의 '투사형' 기억해석 입장을 견지하고 과거를 '현재진행형'으로 판단하면서 이루어진 사례다. 둘째, 기억의 동학 해석을 위해 규범동학 이론과 룩스의 권력론을 차용하여 기억활동가를 기억규범활동가-기억의제활동가-기억현장활동가로 분류하였다. 홉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의 발굴과 반환 과정을 분석한 결과, 규범 출현-확산-내면화의 과정과 유사한 기억의 탄생, 확산과 연대, 그리고 기억현장의 창출이라는 기억의 동학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70년만의 귀향, 기억활동주의, 기억동학, 기억규범활동가, 기억의제활동가, 기억현장활동가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6A3A01079727).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3대학원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기억의 정치” 공동세미나 팀과 유익한 비평을 제시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015년 한일 시민단체는 일제강점기 시절 홋카이도 강제노동 조선인 희생자 유골 115구를 경기도 파주 소재 서울시립묘지에 조성한 ‘70년만의 귀향’(이하 귀향) 묘역에 안치하였다. 이 글은 기억활동주의(memory activism)<sup>1)</sup>의 관점에서 기억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기억의 동학(memory dynamics) 즉, 기억활동과 활동가(memory activities and activists)의 진화와 연대를 귀향 사례 분석을 통해 정립하려는 정치학적 시론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간단한 사례 소개를 한 후 기억연구와 정치학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2장에서는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유형화 논의에 기초하여 귀향을 위치 짓고, 3장에서는 귀향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동학을 해석한 후 결론 맺는다.

## 1. 들어가면서: 사례 소개, 기억연구와 정치학

### 1. ‘70년만의 귀향’ 사례 소개

2015년 귀향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배태기와 전환기 그리고 성숙기를 거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사례 분석에 앞서 귀향에 이르기까지의 기억활동 전개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

“강제노동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되살려 내리는 움직임은 1970년대 일본의 혁신적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전개한 ‘민중사발굴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풀뿌리 ‘기억 활동가’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희생된 민중의 역사를 찾아서 되살려내는 실천적 저항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킨 전후 일본의 국가적이고 공식적인 기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중 홋카이도 소라치(空知)<sup>2)</sup>지역에

---

1) 기억 행동주의로 번역되고 있으나, memory activist는 기억활동가로 번역되고 있는 것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억활동주의로 번역한다. 기억활동주의의 구체적인 정의는 II장에서 다룬다.

서 결성된 민중사 발굴모임인 ‘소라치민중사강좌’는 그 지역에 산재한 탄광과 광산, 댐 공사 체험자의 구술을 토대로 강제노동의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을 진행했다”(정병호 2017, 6).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던 기억활동주의는 홋카이도 후카가와(深川) 일승사(一乘寺)의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스님과 한국연구자 정병호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한일 시민단체들 간의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1997년 ‘홋카이도 슈마리나이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발굴을 위한 한일 대학생 공동워크숍’으로 발전한다. 2001년 공식 명칭을 ‘한일’로부터 ‘동아시아<sup>3)</sup>(의 평화를 위한) 공동워크숍’(이하 워크숍)으로 변경하였다(임재운 2020, 12). 워크숍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총 23회 개최되었다.<sup>4)</sup>

2015년 ‘70년만의 귀향’ 행사는 워크숍을 통하여 발굴한 유골과 홋카이도 각 지 사찰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 115구를 고국으로 모시고 온 것을 지칭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홋카이도의 탄광, 항만, 비행장, 댐 공사장으로 끌려간 지 70여 년만이였다. 양국의 자원 활동가들이 지난 20년간 함께 발굴하고 수습한 유골을 모신 운구행렬은 희생자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길을 되돌아 북에서 남으로 일본 열도를 종단하면서 삿포로, 도쿄,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시모노세키에서 추모제를 지냈다. 바다를 건너 관부연락선이 떠났던 부산항 부둣가에서 도착노제를 지내고 서울광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후 서울시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하였다”(정병호 2017, 3).<sup>5)</sup>

- 
- 2) 소라치는 홋카이도 중서부 내륙 지대를 지칭하며 사사노보효전시관이 위치한 슈마리나이(朱麴内) 호수를 포함한다.
  - 3) 대만과 중국 참가자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서구 각지의 참가자들이 추가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도 참가하였다.
  - 4) 2018년은 대만, 2019년에는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 2월 오키나와 공동워크숍(24차)을 대면으로, 2021년 10월 비대면으로 25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5년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3000명이 넘고 2019년까지 최소 3500명 이상으로 추계된다(임재운 2020, 12). 자세한 워크숍 연표는 임재운(2020, 19) <표2: 동아시아워크숍 연도별 정리>를 참고.

워크숍과 ‘70년만의 귀향’을 사례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기억과 추모의 공인류학 관점에서의 정병호(2017), 1997년 한일대학생 공동워크숍을 민족주의의 과잉 관점에서 분석한 김영환(2002), 워크숍 참여자들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추적한 임재운(2020), 체질인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정병호(1998), 식민주의 유골 반환의 쟁점을 분석한 정희운(2018), 홋카이도 아사지노 육군비행장 건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발굴 사례를 다룬 안신원(2013) 등이 있다. 처음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과 조우하여, 이 기억활동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온 도노히라(2021)의 자전적 기록은 긴 역사와 다양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sup>6)</sup>

## 2. 기억적 전회

현재는 가히 기억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사와 서술이 국가와 학계가 주도하는 공적 역사와 기억의 주요 무대를 점하고 있었다면, 근대의 다양한 식민주의·전쟁·독재의 희생자들 혹은 그들과 연루된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기억을 내세우며, 공적인 공간과는 차별화된 대항 기억을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sup>7)</sup>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체가 되어 공적인 기억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거에 대한 전략적 추모에 개입하는 개인이나 집단적 활동’을 기억

---

5) 유골 귀환 행렬 이동 경로와 홋카이도 유골 수습 현황 지도는 다음을 참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nso=so%3Ar%2Ca%3Aa1%2Cp%3Aa1&sm=tab\\_nmr&query=%ED%99%8B%EC%B9%B4%EC%9D%B4%EB%8F%84%20%EA%B0%95%EC%A0%9C%EC%A7%95%EC%9A%A9%EC%9E%90%2070%EB%85%84%20%EB%A7%8C%EC%9D%98%20%EA%B7%80%ED%96%A5#imgId=image\\_sas%3Ablog54084023%7C10%7C220543162674\\_1685183450](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nso=so%3Ar%2Ca%3Aa1%2Cp%3Aa1&sm=tab_nmr&query=%ED%99%8B%EC%B9%B4%EC%9D%B4%EB%8F%84%20%EA%B0%95%EC%A0%9C%EC%A7%95%EC%9A%A9%EC%9E%90%2070%EB%85%84%20%EB%A7%8C%EC%9D%98%20%EA%B7%80%ED%96%A5#imgId=image_sas%3Ablog54084023%7C10%7C220543162674_1685183450) (검색일 2022.03.22).

6) 이하 워크숍과 관련된 발췌와 인용 중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쪽수만을 표기한 부분은 모두 도노히라(2021)가 출처임을 밝혀둔다.

7) XXX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과 운동단체,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활성화, 임지현(2019)의 『기억전쟁』 출간, 일간지에 연재한 “손호철의 발자국” 등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활동주의라 칭한다. 이러한 기억활동주의의 등장은, 역사 연구에서 기억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최근의 현상인 ‘기억적 전회(mnemonic turn)’<sup>8)</sup>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국가와 학계가 주도하는 공적 역사/기억 공간에서는 문서와 기록이 중요하지만, 기억적 전회를 지나며, 희생자/힘없는 자들의 경험과 증언이 중요해졌다.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와 서사 이론(narrative theory)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발달 속에서, 오늘날 역사와 기억의 관계는 그 기준이 역사에서 기억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역사는 곧 사회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포스트 모던 역사학은 기억을 통해 폐쇄적이고 단일화된 역사를 비판한다”(이현미 2017, 352). 기억적 전회는 역사적 “재현의 중심이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문서와 기록으로부터 힘없는 자들의 경험과 증언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기억연구는 이미 그 출발점에서 소소한 역사적 행위자들이 역사적 재현의 주제로 등장하고 날 것 그대로 남아 있는 희생자의 목소리를 재현함으로써 내러티브와 전거 자료의 민주화를 내장”(CGSI 2017, 11)하고 있다.

피에르 노라는 기억과 역사를 정교하게 구분하였다. “기억은 생명체다. 그 기억의 이름으로 세워진 살아 있는 사회가 낳은 것이다. 기억은 ‘기억하기(remembering)’와 ‘망각하기(forgetting)’의 변증법 속에 있으며, 계속적인 변형을 의식하지 못하고, 조작되고 이용되기 쉽고, 오랫동안 잠재해 있다가 주기적으로 되살아나기도 쉽다. 반면 역사는 과거의 재현이다. 역사는 지적이고 세속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에 분석과 비판을 요구한다. 기억은 ‘기억하기’를 성스럽게 만드는 반면, 역사는 ‘기억하기’를 세속적으로 만든다. 기억은 다양하고 특수하고, 집합적이고 복수적이지만 또한 개인적이다. 역사는 보편적 권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속해 있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정병호 2017, 19에서 재인용). “기억은 문서자료의 실증적 보조 수단이 아니라, 과거를 재현하고 역사를 구성하는 인식론적 정치의 중요한 장치”(임지현 2021, 12)가 된다.

8) 기억적 전회는 탈냉전, 민주화, 지구화 등의 시대적 변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기억적 전회가 정치학에 던지는 과제는 무엇인가? 떠오르는 주제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억의 변형은 쿤(Thomas Kuhn)적인 ‘기억혁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라카토스(Imre Lakatos) 류의 반증주의와 보조가설 등에 따른 연구프로그램의 진화적인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기억의 생애주기(life cycle), 즉 기억의 생산-유통-소비-소멸 과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생산주체는 누구이고 유통경로는 무엇이며, 다양한 기억들이 경쟁하는 기억 ‘공간’은 어디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주체들의 소비와 결정에 의해 선택/배제가 결정되는가? 이 과정에서 개별 기억들의 인정투쟁과 국제연대, 그리고 공적기구와의 조우와 접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종결되는가?

하지만, 기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적 연구는 대부분 기존의 개별 학문 분야<sup>9)</sup>에 산재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억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문적인 차원에서 엄밀한 방법론/존재론/인식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학문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통섭적 학제간 학문 분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sup>10)</sup>

### 3. 기억과 권력

기억과 권력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룩스(Lukes 1974)의 권력 개념이 유용하다. 권력은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벌어지는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태적

9) 역사/인문학/사회과학 등에 기억학이라는 분과학문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분과학문 내에서도 기억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치학 분야에서는 각종 기념물이나 구술사, 풀뿌리 정치사 등에 대한 연구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공식 외교문서로부터 학계와 언론 등 공론장에서의 논쟁, 증언 자료, 신문·잡지 기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영화·만화·소설·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장르, SNS 등 인터넷 미디어”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임지현 2021, 12).

10) 기억연구를 대표하는 세계적 학회인 Memory Studies Association이 2016년에야 창립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 검색일 2022.02.07).

(behavioral) 차원<sup>11)</sup>, 의제(agenda)의 선택과 배제를 둘러싼 구조적(structural) 차원<sup>12)</sup> 그리고 사고(idea), 신념(belief), 규범(norm), 정체성(identity)을 둘러싼 구성적(constructive) 차원<sup>13)</sup>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권력 개념을 기억연구에 도입하면, 기억활동가를 공간, 역할과 목적에 따라 기억규범(norm)활동가, 기억의제(agenda)활동가, 기억현장(onsite)활동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억규범활동가가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기억을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한다면, 기억의제활동가는 무엇을 기억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배제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억현장활동가는 기억경쟁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특정 기억이 지배 기억이 되도록 노력하는 존재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들이 상호연관되어 있기에 명확히 분리되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분석적인 차원에서 개념의 명확성과 이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성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떠한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기억을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기억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인권/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영토화된 기억공간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탈영토화된 지구적 기억공간에서는 인권과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가 중요해질 수 있다. 기억과 관련된 규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으로 기억규범활동가의 영역이다. 이는 기억과 관련하여 가장 기저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기억규범활동가가 반드시 ‘기억’만을

- 
- 11) 권력은 결정과정에서 실현되고, 이러한 결정과정에는 항상 실제적인 그리고 관찰 가능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 12) 정책결정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소위 비결정(nondecision)의 문제로서, 정치 의제를 통제하고 잠재적인 이슈를 배제하는 ‘결정 이전 단계의 권력(Power before the Decision as revealed by the control of political agenda)’을 의미한다.
  - 13) 각 개인의 욕구와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치적 의제를 통제하기 이전의 권력(Power before the control of political agenda)이다. 대표적으로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이라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가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억이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자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으로 규범적 활동을 하는 존재는 아닐 수 있다. 보편 차원에서의 규범적 활동이 기억 영역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것이다. 인권·정의 규범이 기억 영역에 확산되어 들어온 부분을 생각해보면 된다.

구조적 차원에서 본다면, 무엇을 기억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배제할 것인지를 문제가 중요해진다. 새로운 기억의 대상을 발굴하고 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sup>14)</sup> 같이 기억해야 하는 의제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과 이러한 새로운 의제설정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는 ‘의제설정’ 권력의 투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기억(하기/시키기)과 망각(하기/시키기)의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행태적 차원에서 본다면 의제 공간에 성공적으로 신규 진입한 기억과 기존 지배 기억 사이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의 활동공간(onsite)이 중요해진다. 신규 진입 기억과 기존 기억 사이에서 해석과 책임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현실에서 관찰하기 쉬운 기억 권력 투쟁이다. 동상 등 기념물 설립/철거, 추모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억규범활동가, 기억의제활동가, 기억현장활동가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활동목적과 활동공간 상으로 보았을 때 상호중첩되어 있기에 분리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활동가가 하는 역할은 상이하다. 규범적 차원에서 본 질적인 가치와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억규범활동가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억의제를 발굴하여 의제설정의 ‘장(field)’에 균열을 일으켜서 의제로 정립하려는 기억의제활동가,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의제를 현실 공간에서 기존 기억과의 투쟁을 수행하며 사회적 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기억현장활동가는 분명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현실에서 본다면 특정 개인 혹은 단체가 기억 관련 규범/의제/현장 활동가의 역할을 동

14) 의제화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내적인 차원에서 내용의 충실화와 풍부화(내실화)가 필요하고, 의제설정에 동참하는 외부와의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다. 규범만으로 의제화를 주장한다면 ‘몽상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의제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실화와 연대를 통해 문턱(threshold)을 넘거나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여야 한다. 즉, 규범은 필요조건이며, 내실화와 연대를 통한 심화와 확장은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즉, 기억활동가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지가 다를 뿐일 수도 있다. 각 활동가가 가지는 비교우위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다를 수 있고, 주된 역할도 규범/의제/현장에서 차별적이다.

1980년 광주와 수요집회를 사례로 간단한 설명을 시도해본다. 80년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억규범활동가들에 의해 규범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민주화의 효과로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금기시하던 구조적 권력을 돌파하여 새로운 기억 의제로 진입하였다. 구성적인 차원에서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과 내용에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기나긴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의제화를 이루어낸 광주는 발포명령자, 헬기기총소사 등의 규명이라는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행태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예로 수요집회를 들 수 있다. 수요집회는 전쟁과 식민지배, 제노사이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하는 규범활동가들의 노력(유엔 인권선언 등)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후 김학순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기억의제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국내적으로나 지구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기억현장활동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소녀상 건립과 연이은 수요집회 등의 ‘기억의 터’가 마련되면서 기억현장활동이 가능해졌다. 2022년 현재 수요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 수호세력과 철거세력의 갈등은 구성적/구조적 권력이 작동하였기에, 현실에서 관찰 가능하게 드러난 것이다.

즉,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저에 존재하는 구성적 권력에 의한 인식과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구조적 권력에 의한 의제설정이 선행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억규범의 변화 없이는 기억의제화가 어렵고, 기억의제화가 없다면 기억현장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억현장은 기억의제화를 전제로, 기억의제화는 기억규범화를 전제로 한다.<sup>15)</sup>

기억연구의 일천한 역사를 생각할 때 위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논문은 기억연구를 위한 작은 징검다리 혹은 디딤돌을 놓는다는 목적으로 다음 특정한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아직 일천한 기억연구 특히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이론화를 위한 토대 작업으로, 구트만과 위스텐버그(Gutman and Wüstenberg 2021)의 유형화에 기초하여 ‘귀향’ 사례를 설명한다.

둘째, 기억의 동학을 해석한다. 기억의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권력 자원과 관련하여 피네모어와 시킨크(Finnemore and Sikkink 1998)의 규범동학(norm dynamics) 이론을 차용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 II. 기억활동주의 유형화

기억활동주의 연구는 일천하다. 구트만과 위스텐버그(1-2)는 다음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기억정치에서 활동주의가 유례없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지나며 기억연구는 여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조된 기억동원 투쟁이 가지는 현실적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이고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억활동주의의 개념화와 이론화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개념화와 분석틀을 정교화하기 위한 시도로 기억활동주의의 ‘좁은(narrow)’ 정의와 유형화를 제시하고 있다.

### 1. 기억활동가의 정의

구트만과 위스텐버그(2-3)는 우선 기억활동가를 “국가영역(state channels) 밖

---

15) 여기서 제시하는 규범-의제-현장이라는 순차적 차원의 단순 도식화는 논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억의 동학은 세 차원을 오가며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단순 도식화의 위험성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에서 공적인 기억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에 대한 전략적 추모(strategic commemoration)에 개입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행위자”로 정의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는 개인이나, 공식/비공식 단체를 포함한다. 둘째, ‘전략적’ 행동은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적 기억을 명확한 목표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비전략적 개입(non-strategic intervention)<sup>16)</sup> 또한 공적 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억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비국가 행위자들은 ‘밑으로부터(from below)’ 조직된다. 기억활동가는 국가와의 대척점에 혹은 국가의 외곽에 위치한다.

## 2. 기억활동의 유형화

구트만과 위스텐버그는 기억활동주의를 기억활동가의 역할, 타 기억과의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시간대 관념 세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 표와 같이 유형화한다.

〈표 1〉 기억활동가의 유형화: 역할, 상호작용 방식, 시간대 관념 (Gutman and Wüstenberg 2021, 7).

상호작용방식 Mode	투사형 (Warriors)		다원주의자 (Pluralists)	
역할Role/ 시간대관념 Temporality	종료된 과거 (The past has ended)	진행형 과거 (The past is ongoing)	종료된 과거 (The past has ended)	진행형 과거 (The past is ongoing)
희생자 Victims	1. Association for the Recovery of Historical Memory, Spain	2. Memorial to the Victims of Violence, Mexico	3. Reconciliatory tours of the Sudetenland by German and Czech activists	4. Widows Against Violence Empower, Northern Ireland

16) 가정 등의 사적 공간에서의 추모행위는 공적 기억을 목표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전략적’이다.

저항자와 영웅 Resistors and Heroes	5. Former members of the GDR regime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s, Germany	6. The Legacy Museum in Montgomery, USA	7. Hiroshima-Auschwitz Peace March	8. Indigenous memory activists, Canada
얽혀있는 행위자 Entangled agents	9. United Daughters of the Confederacy, USA	10. “We are not Trayvon Martin,” USA	11. Jewish Revival activism, Poland	12. Nakba Memory Activism, Israel
실용주의자 Pragmatists	13. Hubertus Knabe and others in GDR memory politics	14. Filmmaker Joshua Oppenheim on anti-communist violence in Indonesia	15. Institutional leaders turned activists for GDR memory	16.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

위 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Gutman and Wüstenberg 2021, 7-9). 첫 번째 요소로, 기억투쟁에서 기억활동가들이 자임하는 역할에 기초한 분류이다. 희생자(victims),<sup>17)</sup> 저항자와 영웅(resistors and heroes),<sup>18)</sup> 얽혀있는 활동가 (entangled agents),<sup>19)</sup> 실용주의자(pragmatists)<sup>20)</sup> 네 유형을 들고 있다.

17)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로, 상징적 혹은 물질적 보상청구의 기초가 되고 상당한 수준의 정당성(진정성과 트라우마 등을 권위있게 표현할 수 있기에)을 획득하게 된다. 모든 희생자가 자동적으로 기억활동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결단이 요구된다. 당사자주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18) 반대자(dissidents) 혹은 생존자(survivor)이기는 하지만, 희생자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 자임한다.

19) 시공간적으로 역사적 사건과는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물론 그 유산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후에 논의할 연루된 존재(implicated subjects)도 이 유형에 속한다.

20) 쟁점이 된 과거에 직접 연관이나 정서적 개입이 ‘없음(무관함)’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활동가들이다. 인권/민주주의규범/전문가적 표준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며 종종 중재자(mediator)로 기능한다. 많은 경우 전문가(역사가, 학자, memorial officials)들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요소는 다른 기억과의 상호작용 방식이다. 투사(warriors)형은 자신들의 역사 해석만이 유일한 진실이라 간주함에 반하여, 다원주의자(pluralists)는 과거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여지를 남김으로 인해 타자의 입장에 대해 관용적이다.

세 번째 요소는 시간대에 관한 관념 (notions of temporality)이다. 과거 사건에 대한 시간대(역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종료된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기억과 과거와의 관계맺기는 종료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를 종료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기억활동주의는 불가피하게 미래에 진행될 사건을 역전/수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식민/제국주의 폭력에 대한 기억에서, 식민주의를 종료된 과거의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태를 달리한 현재진행형의 사건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기억활동주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유형화는 상관/인과 관계 등 가설형태의 사회과학적 질문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형화에 따른 분류는 가설형태의 비교사례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적 기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은(Gutman and Wüstenberg 2021, 13-14)은 이러한 유형화의 학문적 장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1) 기억-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가들 사이의 충돌과 연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도구를 제공한다. 2) 기억활동가의 진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투사형으로부터 다원주의자로의 변화, 혹은 현재진행형 과거로부터 종료된 과거로의 해석 전이 등은 기억활동가들이 취하는 추모 실천전략과 의미만들기 등에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3) 다양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억-정치의 비교·협력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즉, 개별 기억행동주의의 시계열적 연구 혹은 비교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기억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풍부한 연구 질문을 생산할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귀향 사례를 구트만과 위스텐버그 유형화<sup>21)</sup> 속에서의 이론적 ‘위

21)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기억활동주의 사례들은 Gutman and Wüstenberg 2021, 9-14에 개

치 짓기'와 기억의 동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유형화가 어떤 기억활동이 어떤 조건 하에서 더 성공적인가 등등의 상관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까지 전개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론적 자원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연구의 일천한 학문적 역사를 생각할 때 유형화에 따른 분류는 추후 정치학적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 3. '70년만의 귀향' 사례

귀향을 앞에서 제시한 유형화의 표에 위치시킨다면 10번 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왜 10번 셀에 해당되는지의 논지를 이를 이끌어온 기억활동가들 자신의 연술을 통해 규명을 시도한다.

먼저, 구트만과 위스텐버그가 제시한 10번 셀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본다. “We are not Trayvon Martin – USA” 사례(Gutman and Wüstenberg 2021, 12)로, 2012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자경단원에게 살해당한 Afro-American 10대 Trayvon Martin 사건이다. 1년 뒤 살해범이 석방되자 BLM(Black Lives Matter)운동이 전개된다. 직접적인 연대와 동일시 하는 대신에 비흑인(non-Black)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연대(#NotTrayvon)’를 주장한다. 목적은 마틴의 죽음을 추모함과 동시에 이러한 죽음을 만들어낸 역사와 구조에 대한 자신들의 연루(implication)를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에서 현재진행형인 흑인에 대한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엮혀있는 행위자’로서의 역할 자임, ‘투사형’ 상호작용, 그리고 ‘현재진행형’ 시간대 관념을 가진 기억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첫째, 70년만의 귀향 기억활동가들은 ‘엮혀있는 행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억활동가 도노히라(353-4)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연루되어 있다. ... 이를 ‘사후 공범’이라고도 한다.

---

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한다.

... 전후 세대인 우리는 강제노동 희생자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성립된 전후에 몸을 부지하면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가. 나는 예전에 ‘주체적으로 인수한 전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전후 세대가 전전의 사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 역사가 초래한 희생과 마주한다면 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는 발굴된 유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후 오랫동안 그들의 죽음을 묵인해 왔다.”

한국의 기억활동가 정병호(2017, 37) 역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기억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요즈음 가해자 측인 일본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반인도적 범죄 사실에 대한 부정을 통해 민족적 긍지를 회복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자유주의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남경학살은 조작된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는 매매춘이었을 뿐이며, 징용은 보편적인 국가총동원이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왜곡이 근대 일본의 침략사에 무관심했고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임지현(2019, 296)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 벌어진 잔학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 결과로 혜택을 받는 ‘연루된 주체’로서의 전후 세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 ‘연루된 주체’로서 전후 세대의 삶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 인종청소, 대량 학살, 조직적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의 유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루된 주체’로서 얽혀있는 행위자로서의 기억활동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상호작용방식은 투사형이다. “일본인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쟁과 식민 지배의 과거에 대해 사죄하거나 배상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전후를 살아왔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기억의 삭제 때문이었다. ... 일본의 지배층은 의식적으로 기억의 삭제를 유도했다. ... 식민 지배의 상징인 유골을 민중의 손으로 발굴하는 작업은, 망각을 강요당하거나 망각에 의존한 우리 민중이 스스로 누우치고 기억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며, 민중이 시민으로서 깨어나는 실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강제연행 희생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일은 일본인이 스스로 과거와 현재를 자각하는 실천 과제가 되었다”(41-3). “‘70년만의 귀향’이란 말이 뜻하듯이, 지난 70년 동안 강제노동 희생자들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정부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기만을 기다렸다고 하겠다. ... 이런 상황에서 홋카이도의 수풀 속에 잊혀져 가던 희생자들의 유골을 다시 찾아내서 고국으로 귀환하여 그들을 추모하는 장례식을 거행하고 기념묘역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역사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자, 망각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정병호 2017, 26. 밑줄은 필자 추가).

“전후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한 가해의 기억을 들추어내는 것이 억압받아 왔다”(134). “1960년대 일본의 안보투쟁 세대의 젊은 지식인들은 독일의 ‘68세대’가 나치즘과 전쟁책임을 회피한 자신의 부모세대를 비판한 것처럼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역사로부터 단절시킨 전후 일본의 국가적이고 공식적인 기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 바로 이들이 ‘70년만의 귀향’의 일본측 시민단체의 뿌리가 되었다”(정병호 2017, 6). 국가의 공식 기억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해석을 유일한 진실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 시간대 관념은 현재진행형이다. “전후 7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도 일본사회는 어리석은 역사 인식 때문에 과거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과거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과거를 마주보야 자신과 타인을 깊게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332). “일본사회의 노골적인 혐오발언과 차별의 횡행이 과거를 부정하는 논조로 부합되어 정치와 언론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증오와 폐쇄의 공기는 마치 광현사가 건립된 1934년, 전쟁전야의 파시즘 시대의 도래를 생각하게 합니다”(사사노보효전시관 2019.12).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배의 과거를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사람들과 화해와 평화를 실현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슈마리나이에 모인 사람들은 희생자의 유골과 만남으로써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넘어 평화스런 동아시아를 실현하려고 걸어

왔습니다”(사사노보효전시관 2020.1). 이들에게 과거는 종료된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귀향 행사를 구트만과 위스텐버그의 유형화에 따라 위치 지으면, 얽혀있는 행위자가 현재진행형 과거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전쟁 기억에 대한 투사형 상호작용 방식을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귀향 사례를 기억동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 Ⅲ. 기억의 동학: ‘70년만의 귀향’ 사례 분석

1장에서 기억활동의 영역을 권력과 관련하여 규범/의제/현장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 단계는 기억규범이다. 기억규범은 꼭 기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 차원에서 제기된 규범이 기억의 영역으로 진입/확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기억규범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규범 일반론 차원에서의 접근이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피네모어와 시킨크가 제시한 규범동학 이론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차용한다.

규범동학이론은 단순히 새로운 규범의 출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생명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규범동학이론은 국제정치 차원에서 적십자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사례로 규범의 출현(emergence)<sup>22</sup>-확산(cascade)<sup>23</sup>-내면화(internalization)<sup>24</sup> 과정을 분석하면서 어떤 규범이 어떤 조건하에서 중요해지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2) 규범 엔트레프레뉴어의 출현과 조직적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가치와 정체성의 설득 과정(Finnemore and Sikkink 1998, 896-901).

23) 신생 규범의 정당성/평판/존경의 획득,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통한 확산과 임계점(Finnemore and Sikkink 1998, 902-4).

24) 전문가와 관료집단의 동조와 수용에 따른 제도화 더 나아가서는 법제화(legalization) 수준까지 포함(Finnemore and Sikkink 1998, 904-5).

규범의 출현-확산-내면화의 생명주기는 기억활동주의에서의 기억규범출현-기억의제 설정-기억현장활동의 주기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에 기초한 기억규범의 출현이 기초가 되어 기억의제설정 투쟁이 벌어지며, 상호 충돌하는 기억 중에서 어떤 기억이 내면화되어 공식화/제도화/법제화에 성공할 것인지를 가름하는 기억현장에서의 갈등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귀향에 이르기까지 기억의 동학을 설명한다.<sup>25)</sup>

## 1. 기억규범활동가의 탄생

에이전트로서의 규범 엔트레프레뉴어(entrepreneur)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공감(empathy), 이타주의(altruism)와 아이디어에 대한 헌신(ideational commitment)을 강조한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898). 귀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과 조우하게 된 일본인 승려 도노히라 요시히코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는 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승려로서 장례를 집전하며 망자를 떠나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 죽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방치한 것, 이는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이다. 근대 국민국가와 제국주의가 수많은 망자를 비업(非業 제명에 죽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 비명횡사)의 죽음으로 몰았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태평양 전쟁 종결까지 80여 년간 아시아와 전쟁을 반복하고 식민지주의와 인종주의로 망자의 수를 늘려 왔다”(9-10).

전후인 1945년 9월 일본 홋카이도 북부 후카가와에서 승려의 자식으로 태어난 도노히라는 평화운동에 몰두한 교토 대학생살을 보낸 후, 1973년 승려직을 계승하며 후카가와로 돌아온다. 1975년, 이미 활동 중이던 ‘오호츠크민중사강좌’를 통하여 홋카이도 개척에 희생된 노동자와 죄수의 유골 발굴 스토리를 접하며

---

25) 강제노동과 이에 대한 전후 일본/한국 정부의 정책과 역사적 전개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배경이기는 하지만 핵심이 아니기에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유골을) 파내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파내는 일입니다. 자신의 역사의식과 인권 의식을 파내는 일”이라는 발언을 듣게 되고, 이는 소라치민중사 운동의 구호인 “유골을 파내는 일은 자신의 마음을 파내는 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62).

1976년 5월 강제노동을 경험한 재일코리안의 증언을 듣게 되면서 재일코리안 강제노동역사와 처음 조우하고, 7월 발족한 ‘소라치민중사를이야기하는모임’(이하 소라치민중사강좌)에서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70-79). 1976년 관광차 방문한 슈마리나이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할머니로부터 광현사(光顯寺)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슈마리나이 우류(雨龍)댁<sup>26)</sup> 공사 희생자들의 위패였다(79-89).

이 운명적인 만남 후 소라치민중사강좌는 희생자를 조사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위패에 적힌 이름과 사망연월을 옮겨 적는 것을 시작으로, 댁공사와 관련된 회사와 지역정사(호로카나이정사) 등을 조사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90-91). 시정촌에 ‘매·화장 인허증’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하여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기록을 확보한다. 매·화장 인허증에서 발견된 희생자 수는 110명이었고 그 가운데 조선인 희생자는 15명이었다. 인허증에는 매장인지 화장인지를 구별해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시신은 매장되었다(103).

1976년 처음으로 매장 추정장소인 조릿대 숲을 방문한다(105). 희생자의 유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 일본인 95명의 본적으로 기재된 해당 시정촌에 조사표를 보냈다. 확인된 일본 유족들에게는 사망사실과 유골발굴 참여와 인도 의향을 문의하는 편지를 보냈다(115-6). 일본 유족은 이러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조선인 희생자 15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에 편지를 써 희생자의 유족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한국의 유족을 조사하는 일은 난망했다. 그때 초청강

26)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척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댁이 있는 지역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슈마리나이는 홋카이도의 북쪽에 있으며 ...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에는 2미터 이상의 눈이 쌓이며 ... 영하 41.2도의 일본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김영환 2001, 44).

연을 한 재일코리아인은 “한국에 갈 수 없다면 죽은 본인에게 편지를 보내 보면 어떨까요. 매·화장 인허중에 적힌 건 희생자 본인의 이름과 본적뿐이니,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제안하였고, 편지<sup>27)</sup> 말미에 회송 주소를 명기하였다. 조선인 희생자 15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14명 앞으로 ‘망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1977년 발송하였고, 일곱 통의 유족 답장이 도착하였다(123).

홋카이도 신문이 소라치민중사강좌의 강제노동희생자 조사 활동을 보도한 이후 댐공사 현장에 대한, 강제노동을 직접 수행한 사람 혹은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의 다양한 증언이 자발적으로 이어졌다(153-159). 묻혀있던 기억들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1976년 ‘슈마리나이추도법회협력회’를 출범하고, 1980년부터 4년간의 발굴로 16구가 지상으로 인도되었다(174).

1982년 강제노동희생자 한국인 유족을 찾는 작업이 불교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이루어지나 거대한 역사와 기억의 괴리만을 느끼고 돌아오게 된다(176-189). 이후 이들은 희생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민족의 화해와 우호를 염원하는 상’을 1991년 건립한다. 주민과 신도의 급격한 감소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현사를 소라치민중사강좌가 1992년 인수하여, 1995년 7월 광현사 본당을 역사자료관 ‘사사노보호 전시관(笹の墓標展示館)’<sup>28)</sup>으로 문을 열었다(189-196).

27)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립니다. 이번에 일본 홋카이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라치 지방의 민중사를 조사하는 단체인 ‘소라치 민중사를 이야기하는 모임’을 통해 소라치 민중사, 특히 일본에 끌려온 조선 동포의 역사를 조사한 결과 슈마리나이댐 공사에서 ‘000씨’가 희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단체로 연락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매·화장 인허증에서 확인된 정보(희생자, 호주, 본적, 생년월일, 주소, 사망장소, 직업, 사망일시, 사망 시 나이, 매장 장소, 신고인, 사인)을 기재하였다 (121-2).

28) 이 전시관은 2019년 2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어져 붕괴 위험에 처했고 2020년 1월 붕괴되었다. 2019년 12월 이를 <재생·평화의 숲>으로 재건하려는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 2. 국내·외적 연대와 기억의제활동가로의 진화

규범 연구에 따르면, 규범 엔트레프레뉴어의 개인적인 자질 외에도 조직 플랫폼(Organizational Platfor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899). 기억활동가에 있어서도 조직 플랫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홋카이도 유골 발굴과 반환 사례에서도 기존 조직 플랫폼은 중요하다. 일본 각지의 민중사 운동과 홋카이도 내의 오토츠크 민중사 조직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지역 차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국제적 플랫폼은 기껏하여야 1982년과 1992년 두 차례의 유족과의 만남 시도가 불교 (그것도 불교라는 조직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승려 개인 차원의)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뿐이었다.

일국적이고 소규모 지역차원에서 진행되던 강제노동 희생자에 대한 조사와 유골 발굴 작업은 또 다른<sup>29)</sup>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국제적 연대 차원으로 전개된다. 1989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정병호는 보육 연구를 위해 홋카이도 후카가와외의 일승사 부설 어린이집에서 필드워크를 한 달가량 수행하였다. 도노히라는 1983년 이래 중단된 슈마리나이뎀 공사 희생자의 유골 발굴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정병호와 상의하였고, 정병호(2017, 8)는 “한국에 돌아가 인류학 교수가 되면 학생과 동료들과 함께 와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 유골들을 발굴하고, 억울한 희생의 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와 함께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은 그로부터 8년이 흐른 1997년 여름 실현된다. ‘강제노동희생자유골발굴한일대학생공동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후 워크숍은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개최되었고, 2000년에는 대만과 중국 참가자들까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으로 확대되었다.

---

29)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도노히라 스님과 위패의 만남이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이라면, 지금 설명하는 두 마음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취지에서이다.

2003년에는 삿포로시에서 조선인·중국인 강제 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골을 조사하고 발굴해 유족에게 반환하자는 시민운동 조직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이하 홋카이도포럼)이 일본인뿐만 아니라 재일코리아인, 재일중국인이 함께 하는 국제 시민 활동 단체로 발족했다(28-9). 2005년 ‘구일본아사지노비행장건설희생자유골발굴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2006년 ‘동아시아평화를위한공동워크숍’<sup>30)</sup>이 일본인·아이누인·재일코리아인·한국인·중국인·독일인 등 300여 명의 참가로 개최되었다(35-36).

한국인 유족을 찾는 작업도 지속되었다. 삿포로 별원 희생자 유골 명부에서 한국인 유족을 찾게 되어 유족이 2004년 1월 홋카이도를 방문하였다(252-6). 유족은 홋카이도 지사<sup>31)</sup>를 면담하여 유골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삿포로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유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제2회 홋카이도포럼에 유족이 참여하여 증언하였고, “자신도 홋카이도포럼의 회원이 되어 함께 유골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모금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시민운동이 국경을 초월해 연결되는 것을 눈앞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255). 이렇게 시민운동이 지속되면서 지방행정기관과 기업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홋카이도포럼과는 별도로 유골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던 무로란(室蘭)<sup>32)</sup>과 아카비라(赤平)<sup>33)</sup>의 단체들이 유골반환 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하였다(288).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도 조금씩 드러나 2007년 NHK 9시 뉴스에서도 홋카이도포럼의 활동이 소개되었다(288-9).<sup>34)</sup> 홋카이도포

30) 다양한 강연회(홋카이도 대학교수, 리영희, 중국교수, 마을 노인의 증언 등)와 유골발굴이 진행되었고, 아사지노 발굴은 2010년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되었다(정병호 2017, 30).

31) 2006년 홋카이도 지사는 홋카이도포럼 공동대표를 초청으로 초대해 ... 홋카이도 정부 차원에서도 유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홋카이도는 “홋카이도와 조선인 노동자”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32) 홋카이도 남부에 위치한 무로란은 “일본제철, 신일본제철 등 거대기업이 있고 빛나는 노동운동의 전통이 있다”(288).

33) 아카비라는 홋카이도 서북 지역으로 후카가와 근방이다.

럼의 활동으로 적어도 홋카이도 지방 차원에서는 기억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이다. 내실화 작업과 연대의 확산을 통해 의제화를 위한 문턱 혹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작업들이었다.

2004년 12월 17일 가고시마현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포럼과 도노히라는 한국, 일본, 북한, 중국<sup>35)</sup> 국가지도자에게 유골 반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가고시마 “정상회담 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유골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어떻게 할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정부 수준에서 처음으로 강제 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가 정식 의제(259)로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전몰자가 아닌 민간인 희생자 유골 반환은 정부와 국가 차원의 의제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 3. 기억현장의 탄생과 전개: 70년만의 귀향

2013년 홋카이도포럼, 공동워크숍과 소라치민중사강좌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강제노동희생자추도·유골봉환위원회’가 결성된다(315).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와 유골 발굴·반환 노력이 지지부진하기에 양국정부에는 알리지 않고<sup>36)</sup> 순수

34) 다른 미디어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97년 공동워크숍의 유골 발굴 작업의 전 과정을 동행 취재한 홋카이도TV 기사는 이 작업을 “할아버지를 파다(ハラボジを掘る)”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정병호 2017, 16). 카게야마와 후지모토 감독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의 동아시아공동워크숍을 통한 젊은이들의 만남과 우정, 삶의 변화 과정을 기록한 5부작 다큐멘터리(총 9시간 30분)를 제작하였다(정병호 2017, 25각주 20).

35) 북한과 중국이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삿포로 별원에 남겨지고 합장된 유골에는 한국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한국, 즉 예전 한반도 남부 출신 유골이 61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한반도 북쪽 출신 희생자가 13구, 본적 불명 조선인 유골이 11구였다. 중국인 유골이 6구, 일본인으로 보이는 유골도 10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58-9). 북한과 중국에서는 답신이 왔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답장은 없었다.

36)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적고 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어떻게 연락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미 유골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협의해 왔다. 우리가 봉환을 계획하는 유골의 존재도 충분히 알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유골 반환

한 시민단체 차원에서만 진행하기로 한다. 안장할 장소로 유족이 희망한 ‘망향의 동산’은 “115구 유골 각각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유족동의서<sup>37)</sup> 요구”(정병호 2017, 32)하면서 “유족이 판명되지 않은 유골과 합장된 유골은 받아들 수 없다”(318)고 답변하여 무산되었고 서울시의 협조로 파주 서울시립묘지에 조성한 ‘70년만의 귀향’ 묘역에 안장되었다.

봉환 여정은 희생자가 밟은 길을 역순으로 2015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sup>38)</sup> 봉환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미디어인류학자 데이비드 플래스(David Plath) 명예교수 촬영팀은 전체 봉환일정에 참여하면서 다큐멘터리 ‘길고 긴 잠(So Long Asleep)’<sup>39)</sup>을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과거의 역사적 희생을 함께 발굴하며 화해와 우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풀뿌리 평화운동의 선구적 사례”로 제작하였다.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일본과 한국의 민중이 스스로의 의지로 화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의 결실이었다. ... 유골 115구를 봉환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시도해 일군 화해의 일환이다.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화해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322).

---

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시 알릴 필요도 없었다. 이번은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협의해 직접 유골 봉환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일부러 양국 정부에 정식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317).

- 37) 이 유골은 합골되었기 때문에(개별성을 상실한 화장된 유골인 관계로), 개별 희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유족동의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 38) 별도의 사진전(9.9-20)과 보고회(9.9)가 열렸고, 9.19 19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장례식이 개최되었다. 봉환단은 유족을 포함한 한국인 13명, 일본인 20여 명,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참가자들까지 총 50명이었다(318).
- 39) 플래스 교수는 서울시청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추모하였다. “흰 유골함을 든 동아시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미국인들과 전세계가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 수십 명의 동아시아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날을 상상해 봅시다. 정부가 해 주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날을, 잃어버린 유골을 담은 함을 모든 인간의 삶을 담고 가는 신성한 상징으로 바꾸어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노력하는 날을, 마침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가는 그날은 진정한 세계평화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정병호 2017, 33).

70년만의 귀향 묘역은 이후 기억의 현장이 되었다. “가족 묘지를 찾았던 일반 시민들도 역사적 희생자들을 위한 묘역이 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추모의 발길을 이어갔다 ... 일본의 평화운동 단체들은 이 ‘70년만의 귀향’ 묘역을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시민들이 우선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정병호 2017, 34). 이후 공동워크숍의 대만 참가자들, 그리고 ‘길고 긴 잠’ 다큐를 본 미국 교사들 등 다양한 세계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즉 묘역은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터전’으로 역할”(임재운 2020, 74-76)을 한다.

귀향 행사 이후 (사)평화디딤돌<sup>40)</sup>은 강제노동 “희생자들 ... 각 개인의 존재와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평화디딤돌’<sup>41)</sup>을 놓기 시작”(정병호 2017, 38)하였고, 다양한 기억의 현장<sup>42)</sup>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묘역이 ‘기억의 터’라면, 이후 진행한 다양한 기억현장사업은 그람시적 표현을 빌리자면, 기억의 ‘진지’를 만들어 ‘진지전(war of position)’을 수행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또한 워크숍과 귀향 행사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참여자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

40) (사)평화디딤돌은 70년만의 귀향을 준비하면서, 2015년 8월 워크숍 한국사무국을 사단 법인으로 확대 개편 제도화한 것이다(<http://steppingstone.or.kr>).

41) 평화디딤돌 명칭은 독일 행위예술가 군터 뎀니히(Gunter Demnig)의 ‘걸림돌(stolperstein)’과 관련이 있다. 나치즘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이름을 새긴 동판을 보도블록에 설치하여, 행인들의 발걸음이 걸리게 되면 행인은 이를 응시하게 되면서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를 가진 것이 걸림돌이다. 이를 한국어로 평화디딤돌로 번역한 것이다. 평화디딤돌 놓기 행사는 2016년 3월 군터 뎀니히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2022년 2월 현재 15차례 이상 진행되었다. 위치는 홋카이도 희생 현장과 희생자들이 살았던 한국의 마을 어귀이다. 개별 위치는 평화디딤돌 사이트 참조 <https://steppingstone.or.kr/history/>(검색일: 2022.02.07).

42) 2018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사진전>,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을 위한 국제회의>, 2018년 강제노동 관련 역사지 가이드북 <12:34 시간여행자 가이드북 - 홋카이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간, 2019년 <잊혀진 영혼들-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과 귀환>, <‘길고 긴 잠(So long asleep)’상영회>, <‘유골을 말하다’ 도노히라 요시히코 대담>, <‘유족의 삶을 말하다’ 플레이백 시어터>, <정태춘 ‘징용자 아리랑’ 추모공연>, <‘70년 만의 귀향’ 사진전> 등이 있다(<https://steppingstone.or.kr/history/> 검색일: 2022.02.07).

거나, 정체성을 찾거나, 본인의 소속감”을 찾고,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한일 간의 시민들이 다름을 인식하고 이해를 통해 연대를 만들어가는 ... 새로운 공동체의 생성”(임재운 2020, 108)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상 ‘70년만의 귀향’ 사례의 역사와 현재를 통하여 기억활동가의 진화과정과 기억의 동학을 살펴보았다. 기억규범의 탄생으로부터, 기억의제의 설정, 기억현장의 창출과 활동 등의 과정은 피네모어와 시킨크가 제시한 규범동학과 맞닿아 있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규범동학에서 규범의 출현-확산-내면화의 과정과 거의 유사하나, 마지막 단계인 내면화의 과정이 국가와 정부에 의한 제도화/법제화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억현장의 창출과 이것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볼 때 제도화/법제화를 위한 전단계까지의 준비 기간이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억과 권력과의 관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본다면, 기억의 기초 혹은 기저로 작동하는 규범활동에 기반하여 기억의제가 설정되었고, 이 기억의제로 인해 현실에서의 기억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억‘현장’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에 대신하여

이 글은 기억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정치학적 시론이다. 기억적 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기억활동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와 기억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억적 전회는 적어도 공적인 부분이 장악하고 있는 역사만큼이나(혹은 역사보다) 기억의 영역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기억활동주의는 매우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억활동주의에 대한 학문적 분석틀을 만들기

위한 작은 디딤돌적인 시도로서, 첫째 기억활동 유형화에 대한 논의를 도입하여 70년만의 귀향을 해석하였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까지의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유형화에 따른 분류는 바로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장 토대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70년만의 귀향은 ‘엮혀있는 행위자’로 자임하는 기억활동가들이, 자신의 기억해석에 대한 투사형 입장을 견지하며 과거를 종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으로 판단하면서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인가? 일본의 과거 망각하기와 한국의 과거 과잉 기억하기의 방식이 바뀐다면, 엮혀있는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실용주의자로서, 투사형으로부터 다원주의형으로, 현재진행형 과거에서 종료된 과거로의 전이는 가능한가? 즉, 기억활동가가 자임하는 역할, 과거에 대한 인식,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무엇인가의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사례 연구들이 추가되어 역사적/지역적 비교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억의 동학을 해석하기 위해 규범동학 이론과 룩스의 권력론을 차용하여 기억활동가를 기억규범활동가-기억의제활동가-기억현장활동가로 분류하였고, 이를 귀향 사례에 적용하여 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골의 발굴과 반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규범 출현-확산-내면화의 과정과 유사하게 기억의 탄생, 확산과 연대, 그리고 기억현장의 창출이라는 기억의 동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평화디딤돌’을 주도한 정병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양국의 국가권력이 외면하고 빨리 지우려고 하고 있지만, 양국의 시민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늘 새롭게 확인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평화디딤돌은 과거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로 희생되어 역사상 숫자로만 기록된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을 일상생활 공간에서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상징물’이자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같은 장소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유린당한 삶의 진실을 확인하고 되새기는 ‘진실의 상징물’이다. 역사적 진실

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족 간 화해와 인류의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평화의 상징물’이기도 하다”(정병호 2017, 38).

향후 진행되었으면 하는 연구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마친다. 하나는 기억활동주의 유형화에 따른 다양한 기억활동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 보다 일반적인 상관/인과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분석틀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기대하여 본다. 다양한 유형이 어떻게 진화하고 연대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억동학을 통해 만들어진 기억현장이 어떻게 국가와 학계에 받아들여져 내면화 될 수 있는지, 즉 어떤 조건하에서 어떠한 활동이 제도화/법제화의 수준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 글이 이러한 연구과제를 만들어내는 데 자그마한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 김영환. 2002. “한일시민연대를 통해 본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 한일공동워크샵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 도노히라 요시히코 저. 지상 역. 2021. 『70년만의 귀향: 홋카이도 강제 노동 희생자 유골 귀환의 기록』. 서울: 후마니타스.
- 사사노보효전시관 (笹の墓標展示館). 2019.12/2020.1. “재생·화해와 평화의 숲 만들기 취지문.”
- 안신원. 2013. “일본 천모야 구일본육군 비행장 건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발굴.” 『비교일본학』. 28권, 27-47.
- 이현미. 2017. “『제국의 위안부』와 기억의 정치학.” 『국제정치논총』. 57권 2호, 329-366.
- 임재윤. 2020.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활동 참여자의 변화 과정: 동아시아 공동워크숍을 중심으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사논문.
- 임지현. 2019. 『기억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서울: Humanist.
- 임지현. 2021.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서울: Humanist.
- 정병호. 1998. “한국 체질인류학의 역사적 과제: 일본 북해도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발굴의 인류학적 의미.” 『해부생물인류학』. 11권 2호, 213-229.
- 정병호. 2017. “기억과 추모의 공공인류학: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 발굴과 귀환.” 『한국문화인류학』. 50권 1호, 3-46.
- 정희윤. 2018. “21세기 식민주의 유골 반환운동의 딜레마: 베를린-나미비아와 홋카이도-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 CGSI. 2017. “HK일반연구원브리프자료.”
-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Autumn 1998.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887-917.
- Gutman, Yifat and Jenny Wüstenberg. 2021. “Challenging the meaning of the past from below: A typology for comparative research on memory activists.” *Memory Studies*, 1-17.

Lukes, Steven. 1974. *Power: A Radical View*. MacMillan.

- 인터넷 자료

70년만의 귀향 홈페이지 <http://return2015.com> 검색일: 2022.02.07

평화디딤돌 홈페이지 <https://steppingstone.or.kr/history/> 검색일: 2022.02.07.

Memory Studies Association

[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https://www.memorystudiesassociation.org/about_the_msa/) 검색일: 2022.02.07

투고일: 2022.02.16. 심사일: 2022.03.19. 게재확정일: 2022.03.21.
--

## An Essay on Memory Studies from the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of “Returning Home in 70 Years”

Lew, Seok-Jin | Sogang University

This essay is an attempt to expand memory studies into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The case I analyze is “Returning Home in 70 Years” which is a civic movement for the Excavation and Repatriation of the Korean Forced Labor Victims in Hokkaido, Japan. First, I borrow the typology of memory activism suggested by Gutman and Wüstenberg. Returning Home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Entangled Agents,’ who are ‘warriors’ with the perception of the past as ‘ongoing.’ Second, in order to analyze Memory Dynamics, I utilize the Lukes’ conceptualization of Power and Finnemore&Sikkink’s Norm Dynamics theory. Memory Activists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Memory Norm Activist-Memory Agenda Activist-Memory Onsite Activist. Returning Home event was made possible by Memory Norm/Agenda/Onsite Activities over about 50 years’ efforts.

---

**Key Words** | Returning Home in 70 Years, Memory Activism, Memory Dynamics, Memory Norm Activist, Memory Agenda Activist, Memory Onsite Activist